

정부 지원정책과 행복도의 관계 분석

- 중장년을 대상으로

윤재희*·이수경**

부탄정부의 ‘총행복지수’,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세계의 관심이 국민의 행복, 삶의 질, 삶의 의미로 점차 집중되고 있다. 2017년 고령사회로 조기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개시에 훨씬 앞서는 강제 퇴직은 여유 있는 퇴직준비와 노후대책을 예비하지 못해 중장년의 빈곤화 가능성을 높이고, 고령자의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도를 저하시킨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조사(2015년) 장년층 부가조사에 포함된 50세 이상 74세 이하 은퇴자 5,011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정책 선호도와 행복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의 모든 연령에서 의료비 지원을 가장 희망하였고, 생활비지원, 주거비 지원 순으로 정부 지원 정책을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연령대에서는 50대보다 70대가 낮은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년층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정부 차원에서 건강, 재정, 주거 등에 대한 충분한 퇴직준비를 지원하고 더불어 장년층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 중고령자, 퇴직준비, 정부지원정책, 국민의 행복, 삶의 질

I. 서론

국민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부탄정부의 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유엔의 매년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매년 발간되는 ‘세계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이런 세계적인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특히 부탄정부의 총행복지수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국정목표로 하여 심리적 후생, 시간 활용, 공동체의 활력, 문화, 건강, 교육, 생태의 다양성, 생활수준,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younj91@naver.com)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antirose@naver.com)

통치의 총 9개의 규범적인 영역을 구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민 행복, 삶의 질, 삶의 의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빠른 경제성장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기준인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비해 주관적 기준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결과를 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대교육년수, 평균교육년수, 기대수명 등의 객관적인 조건은 1980년 0.628에서 2015년 0.898로 급격히 증가하여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조사대상 188개국 중 17위)임을 보여주고 있다(UNDP, 2015). 반면에 유엔지속가능개발연대(SDSN) 세계행복보고서(WHR)에 의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의 주관적인 지표는 2013~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WHR 순위는 OECD 34개국 중 27위,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는 58위로 HDI 순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BLI)’는 주거, 소득과 자산, 직업과 수입, 사회관계·공동체, 교육과 능력, 환경의 질,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의 24개 지표를 종합해 삶의 질을 측정한다. 2016년 기준으로 BLI 순위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조사 대상 38개국 중 28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행복 추구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임을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4대 비전 중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하위 요소에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생활비 절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average longevity)이 연장되면서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원통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전체 인구증가율에 비해 중년과 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증가율이 100%라면 한국의 중년과 노년인구의 증가율은 거의 200%에 달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비교적 발달한 유럽에서는 1990년대에 이미 인구구조가 항아리형으로 변화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가 많은 아시아도 2025년에는 인구구조가 원통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기되고 있다(Woodruff-Pak, 1997).

우리나라 경제의 근대화와 고도성장을 주도해오던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퇴직자 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 후 태어나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소비와 생산의 주도 세력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를 넘는 시점인 2020~2028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초고속 고령화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지순, 2010). 더불어 이들의 대거은퇴로 노동시장의 공백과 그로 인한 성장동력이 둔화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조성혜, 2010).

한국은 그동안 수출 주도의 전통적인 추격형 전략(catch-up strategy)을 통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고속 성장 후 상대적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에 달한다.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경제를 공고히 하고, 동시에 사회통합에 보다 역점을 두는 정책들이 필요하다(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4).

1997년 말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1999년 9월 7일 제정하였고, 2000년 10월 1일 시행하였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로서 <표 1>과 같이 맞춤형 급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된다.

<표 1> 생애주기별 맞춤형 급여제도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선정기준 다층화	최저생계비 이하 4인 가구 기준 167만원 (생계/의료/교육/주 거 합산)	생계급여	중위소득 28%이하(4인 가구 기준 118만원) 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4인 가구 기준 169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 지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기준 182만원) 임차가구 전월세, 자가 가구 집수리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40%이하(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211만원)) 초중고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가구당 평균 급여액 (개편 전) 40.7만원 (개편 후) 45.6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기준선(4인 가구 기준) (개편 전)297만원 - (개편 후)485만원		

반면, 한국에서 중산층은 위축되고 있으며,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을 줄임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 개혁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지출의 효과는, 특히 상대빈곤율이 49%에 달하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퇴직에 대비한 민간부문의 저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4).

2017년 고령사회로의 조기진입 상황에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조기퇴직 증가 등으로 인한 중장년 퇴직예정 세대들의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지만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60세까지 공백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이 보내야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노후의 사회보장제

도가 미흡하고, 고용상태에서도 퇴직이후의 생활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반면, 기업 경영악화 등의 여러 이유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의 경제적 지출부담과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퇴직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고중승, 1999; 박표진, 2009).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 세대들은 전통적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사회체계에서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임에도 가족생계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퇴직을 역할상실 등의 위기로 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소득 감소, 퇴직에 대한 준비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퇴직을 개인에게 부정적인 생활 사건으로 본다(신현구, 2007). 따라서 장년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 선호도와 장년층의 행복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50세에서 만 74세까지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이 각 개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보고자하며, 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장년층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희망하는 정부 지원 정책의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 정부의 지원 정책 선호도와 장년층의 행복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II장에서는 정부지원정책선호도와 행복도의 관계요인을 고찰한다. 제 III장에서는 연구대상인 『한국노동패널조사』 장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제 IV장에서는 만 50세 이상 74세 미만의 장년층 표본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정부지원의 실태, 정부지원과 행복도의 관계의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결과 및 이의 정책적 함의를 요약한다.

II. 정부 지원정책과 행복의 관계요인 고찰

1. 장년층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고령 사회로의 이행이 극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조성남, 2004). 인류 전체를 보아도 고령 사회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으로, 수많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이러한 명백한 사회적 변화는 정치, 사회,

경제적 함의를 넘어 학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그 맥락에서 장년층의 삶의 질, 행복도와 정부 지원정책선호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장년층의 개념

장년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장년층’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년층, 중장년, 고령자 등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없으며, 개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다르게, 혼재해서 정의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생업지원을 비롯하여, 경로우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상담 입소 등에 있어서 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으로 60세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며,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가 생존하는 동안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연금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은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은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최흥기, 2011).

본 연구에서는 장년층을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 18차 장년층과 동일하게 만 50세 이상 7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나. 장년층의 특성

장년층, 고령자에 대해서는 심리, 인지적, 행동적 특성 및 전생애 발달관점에서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 관점인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의 측면에서 장년층의 행복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Sammartino(1987)은 나쁜 건강상태가 생산성 감소와 기대수명까지 감소시켜 근로자의 빠른 퇴직을 촉진시킨다고 하였으며, Bound et al.(1995)는 백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건강상태를 가진 유색인종의 노동시장 조기탈퇴를 근거로 건강상태가 은퇴에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바 있다. Kim & Devaney(2005)과 권승·황규선(2004)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나쁜 건강상태의 근로자가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민정(2013)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행복 결정요인으로 건강한 신체와 소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을 밝혔으며, 이 외에도 박경숙(2001)은 건강한 근로자의 비취업상태 기간이 짧으며 다양한 경력이동을 보임을 밝혔다. 이처럼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은퇴로 이어져 장년층의 노후의 삶을 위협하며 삶의 질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감소함에 따라 가족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 전에는 대부분의 장년층의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부부만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현대는 점차 부부만 사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장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퇴직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

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고령자의 67.3%가 부모 부양은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2014년에는 34.1%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점차적으로 부모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16a).

2015년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58.5%), 자녀 또는 친척지원(28.6%), 정부 및 사회단체(12.8%)순으로 나타났으며,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44.7%), 연금 및 퇴직금(34.1%), 재산소득(14.0%)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전체 고령인구 중 42.3%를 차지하며,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로 노후소득지원이 39.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요양보호서비스(34.2%), 노후취업지원(15.5%)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a).

국내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16세이다. 고용노동부 조사(2010)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국내기업이 72%, 총 2,469개소 중 1,779개소가 정년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년 연령을 55~60세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약 95%로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 범주에 속해있음을 나타냈다. 외국의 정년 현황을 보면 정년제도를 연령차별로 보아 금지하거나 공적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정년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연령차별금지법(1986년)을 개정하여 정년제를 폐지한 상태이며, 일본은 2006년에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더불어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연금수급개시 연령과 정년을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최강식 외 2013). 반면, 은퇴연령은 정년과 차이가 있는데, 이를 OECD국가의 평균은퇴연령에서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은 63.9세, 여성은 62.8세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의 은퇴연령은 59세 또는 60세로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평균은퇴연령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평균은퇴연령(2006-2011) 국제비교

(단위: 세)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OECD평균
남성	71.4	65.2	63.6	65.2	69.3	60.8	59.1	63.9
여성	69.9	64.8	62.3	62.9	66.7	59.2	59.5	62.8

출처: OECD(2011).

노년기에는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주택이 생활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 주택의 중요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빈곤하기 때문에 주택을 마련하거나 유지 또는 보수 및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은 절실하다(홍숙자, 2015). 2015년부터 시행된 ‘주거급여법’을 통하여 주거의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유지 수선비 등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장년층의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지원은 삶에서 노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2. 정부의 지원 정책, 행복과의 관계

국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 심리적 안녕, 웰빙(well-being), 삶의 질 등 여러 가지 개념과 함께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다. 국민 행복이 주요 이슈가 되는 원인은 국민 행복을 국민총생산(GDP) 기준으로 평가하던 국내의 흐름에서 복지, 삶의 질, 웰빙 수준의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윤강재·김계연, 2010)

교육과 관련해서 Lauer와 Lauer(2007)는 교육이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교육은 세대 간의 문화 전승과 사회화,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들에게 더 나은 사회적 지위의 이동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회구성원들의 지적·정서적·사회적 잠재력을 계발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Campbell 외(1976)와 Campbell(1981)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보다 즐겁고 활력이 넘치며 자신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 Easterlin과 Sawangfa(2009)도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특정 영역들에서 보다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수준은 개인에게 상향이동(upward mobility)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여부, 정규직 취업가능성, 직업위세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Blau & Duncan, 1967; 조민수, 2008), 또한 교육을 통해 얻어진 직업은 다시 소득수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적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Park & Smits, 2005).

행복이론은 크게 하향 확산이론(top-down spillover theory)과 상향 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하향 확산이론을 살펴보자면, 한 개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질은 객관적 상태와 이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무관하게 행복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험에도 행복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불행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험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 행복을 결정짓고 이것이 다시 경험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향 확산이론은 객관적 조건, 인지적 평가와 행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인지적 경험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고 본다. 즉 즐거운 경험은 행복으로, 불쾌한 경험은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Heady et al., 1991).

하향 확산이론, 상향 확산이론 논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향 확산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지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삶의 영역의 만족도가 합쳐져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을 형성한다고 가정해왔다(Andrews & Withey, 1976; Argyle, 1987; Campbell et al., 1976; Headey et al., 1985, 재인용). 이러한 상향 확산이론을 정부의 지원 정책과 행복간의 관계에 적용

하면, 좋은 정부 또는 질이 높은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나 제도의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이르는 상향적 확산경로를 거쳐 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Sirgy & Lee(2006)에 따르면 행복은 피라미드 형태의 모형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삶의 영역인 사회생활, 물질적 생활, 여가생활, 직업 생활 등의 만족도에 영향을 받게 되며, 보다 하위 수준인 지역사회 환경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장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과 행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한정하거나 특정연령에 한정된 연구이다. 김은영(2014)은 은퇴자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연구로 재정적인 부분에 한정되어있다. 안중범·전승훈(2004)은 조기은퇴와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부분에 한정된 연구였다. 최영출(2014)은 3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결과는 복지예산이 높을수록 오히려 국민행복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행복간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면이 있다. 최말옥·문유석(2011)은 부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경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이현국·이민아(2014)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활동시설, 대중교통,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서비스의 성과에 대해서 만족할 때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장년층의 사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모두 특정한 정부 관련요인들과 국민행복, 두 변인 간의 관계만을 규명하고 있을 뿐, 장년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정책과 행복의 관계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공공서비스와 삶의 질 간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이영균·김동규(2007)는 성남시 거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 및 위생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송건섭(2007)은 대구광역시 및 경산시, 청도군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간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한 결과에서 지역 간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교육 및 문화생활과 같은 복지에 관한 공공서비스가 주민의 삶의 질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을 밝혔다. 고명철(2013)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도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국외 문헌에서도 정부 지원 정책과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Diener와 Fujita(1995)는 행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원이 개인의 고유한 가치나 목표 달성에 도우며 될 때 더 행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Dimian & Barbu(2012)은 건강과 교육, 연금, 노인서비스 등 비물질적 복지와 관련한 정부 지원이 행복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Easterlin(2006)은 생애주기별 행복에 관한 연구에 영역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영역별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럽 12개국에서 공통적으로 삶의 주거와 재정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계약이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uadrado-Ballesteros et al. (2012)는 스페인 78개 타운과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민 복지(welfare) 및 삶의 질에 공헌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 지원과 행복에 관한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년층의 행복과 정부 지원 정책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사회도 국가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령 사회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전세계적인 이슈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인 현재의 중장년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정부 지원 정책과 행복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III. 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한국노동연구원의 18차 노동패널조사의 개인별조사, 18차 『삶의 인식 부가조사』의 행복관련 변수와 『장년층 부가조사』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선호도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8차 노동패널조사 대상자 중, 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로 구성된 장년층 부가조사(5,153명)와 삶의 인식 부가조사(13,925명)에 동시에 응답한 대상자 5,131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3> 변수설명

구분	변수명	문항변인명
18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성별	p180101
	연령	p180107
	학력	p180110
18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장년층 부가조사	혼인 상태	p185501
	자녀 유무	a188601
	은퇴 여부	a188201
	경제적으로 도움 받는 여부	a188604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여부	a188623
	정부의 지원정책 선호도	a1888530
18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삶의 인식부가조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a188138
	일에 대한 가치	a188139
	삶의 상태(사다리),	a188140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행복정도	a188141
	5년 전의 삶의 만족도	a188142
	5년 후의 삶의 만족도	a188143

자료: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 삶의 인식 부가조사. 장년층 부가조사.

2. 분석 변수 및 방법

가. 분석 변수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8차 조사(2015년)의 본 조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정보를 변수로 하였고, 만 50세 이상 만 74세 이하 장년층을 대상으로 장년층부가조사에서는 은퇴여부, 혼인상태, 자녀유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또는 받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보았고,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보고자 한 것은 ‘은퇴 준비 및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설문 문항 중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다음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주거비 지원,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기타로 구분한 정부의 지원정책 선호도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삶의 인식 부가조사’에서는 행복과 관련된 6가지 설문을 제시하고 있으며(<표 4> 참고), 관련 문항을 살펴보면, 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② 일에 대한 가치, ③ 삶의 상태(사다리), ④ 모든 것을 고려할 때의 행복정도, ⑤ 5년 전의 삶의 만족도, ⑥ 5년 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0점(전혀 행복하지 않다)에서 10점(매우 행복하다)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정부지원정책 선호도,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배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행복 관련 변인 문항

행복 관련 변인	질문내용	11점 척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 완전히 만족한다(10)
일에 대한 가치	하시는 일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전혀 가치가 없다(0) 매우 가치가 있다(10)
삶의 상태(사다리)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 (0)은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최선의 상태(10) 최악의 상태(0)
행복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0) 매우 행복하다(10)
5년 전의 삶의 만족도	5년 전,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0) 완전히 만족했다(10)
5년 후의 삶의 만족도	5년 후, 전반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0) 완전히 만족할 것이다(10)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대상은 총 5,131명으로 인구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성별구성은 남성 2,414명(47.0%), 여성 2,717명(53.0%)이며, 연령별 구성은 50대 2,416명(47.1%), 60대 1,973명(38.5%), 70대 742명(14.5%)이었다. 또한 이들의 학력분포는 각각 고졸미만이 2,429명(47.3%)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1,840명(35.9%), 대졸 519명(10.1%), 전문대졸 233명(4.5%), 석사이상 110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여부에 대해서는, ‘은퇴하였다’가 1,040명(20.3%), ‘은퇴했으나 소 일거리를 하고 있다’가 128명(2.5%), ‘은퇴하지 않았다’가 3,049명(59.4%), ‘취업해 본 적이 없다’가 914명(17.8%)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714명(91.9%), 자녀가 없는 사람은 417명(8.1%)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 유배우자가 4,121명(80.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별 531명(10.3%), 이혼 335명(6.5%), 미혼 84명(1.6%), 별거 60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사람은 총 4,216명으로 의료비 지원 2,242명(53.1%), 생활비 지원 1,356명(32.1%), 주거비 지원 602명(14.3%), 기타 22명(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장년층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있어서 의료비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인구학적 특성

분석 기준	구분	인원(명)	비율(%)	분석 기준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2,414	47.0	자녀유무	있다	4,714	91.9
	여성	2,717	53.0		없다	417	8.1
	전체	5,131	100.0		전체	5,131	100.0
연령	50 대	2,416	47.1				
	60 대	1,973	38.5				
	70 대	742	14.5				
	전체	5,131	100.0				
학력	고졸미만	2,429	47.3	혼인상태	미혼	84	1.6
	고졸	1,840	35.9		기혼유배우자	4,121	80.3
	전문대졸	233	4.5		별거	60	1.2
	대졸	519	10.1		이혼	335	6.5
	석사이상	110	2.1		사별	531	10.3
	전체	5,131	100.0		전체	5,131	100.0
	은퇴여부	은퇴	1,040		20.3	정부의 지원정책 선호도	주거비 지원
부분은퇴		128	2.5	생활비 지원	1,356		32.1
은퇴안함		3,049	59.4	의료비 지원	2,242		53.1
취업무경험		914	17.8	기타	22		0.5
전체		5,131	100.0	전체	4,216		100.0

분석 기준	구분	인원(명)	비율(%)	분석 기준	구분	인원(명)	비율(%)
현재 경제적 도움받는 여부	받고있다	925	18.0	현재 경제적 도움주는 여부	주고있다	620	12.1
	받지않는다	4,206	82.0		주지 않는다	4,511	87.9
	전체	5,131	100.0		전체	5,131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 18차 조사.

2. 상관분석

각 변수에 대해 행복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6가지 행복에 대한 변인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과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과 만족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 도움을 주고 있을 때 만족도와 행복도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성별을 제외한 각 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므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6> 상관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가치	삶의 사다리	행복	5년 전, 삶의 만족도	5년 후, 삶의 만족도
성별	.008	-.020	.009	.006	.001	.010
연령별	-.025	-.080**	-.039**	-.037**	-.014	-.134**
학력구분	.149**	.184**	.181**	.165**	.137**	.188**
혼인상태	-.120**	-.118**	-.129**	-.141**	-.134**	-.148**
자녀 유무 여부	-.095**	-.075**	-.107**	-.082**	-.077**	-.094**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여부	.088**	.114**	.103**	.094**	.077**	.124**
경제적으로 도움주는 여부	-.045**	-.077**	-.053**	-.048**	-.043**	-.065**
은퇴여부	.056**	.084**	.058**	.069**	.056**	.078**
정부의 지원정책 선호도	.113**	.097**	.149**	.118**	.094**	.110**
삶의 만족도		.743**	.749**	.797**	.661**	.706**
일에 대한 가치			.686**	.712**	.592**	.661**
삶의 사다리				.796**	.657**	.721**
행복					.765**	.814**
5년 전, 삶의 만족도						.673**
5년 후, 삶의 만족도						

* p<.05, **p<.01

3. 인구학적 특성과 행복과의 관계 분석

우선, 성별에 따른 행복 관련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성별에 따른 행복도

성별	남(2,414명)		여(2,717명)		t 값
	M	SD	M	SD	
삶의 만족도	5.56	1.482	5.59	1.541	-.588
일에 대한 가치	5.78	1.570	5.72	1.522	1.468
삶의 사다리	5.73	1.562	5.76	1.564	-.659
행복	5.93	1.547	5.95	1.549	-.427
5년 전, 삶의 만족도	5.82	1.554	5.82	1.540	-.057
5년 후, 삶의 만족도	6.10	1.592	6.14	1.623	-.714

* p<.05, **p<.01, ***p<.001

연령에 따른 행복 관련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일에 대한 가치, 삶의 사다리, 행복, 5년 후 삶의 만족도에서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4가지 요인에 대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일에 대한 가치(F=18.442, p<.001), 삶의 사다리(F=8.782, p<.001), 행복(F=6.741, p<.001),에 있어서, 50대가 70대보다 만족도가 높고, 60대가 70대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5년 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50대>60대>70대 순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표 8> 연령에 따른 행복 관련 변인 분석

행복 관련 변인	50대(2,416명)		60대(1,973명)		70대(742명)		전체(5,131명)		F	사후검증 (Scheffe)
	M	S.D	M	S.D	M	S.D	M	S.D		
삶의 만족도	5.60	1.517	5.59	1.509	5.46	1.514	5.58	1.514	2.323	
일에 대한 가치	5.84	1.540	5.74	1.566	5.45	1.467	5.75	1.545	18.442***	50>70*,60>70*
삶의 사다리	5.77	1.551	5.80	1.563	5.53	1.586	5.75	1.563	8.782***	50>70*,60>70*
행복	5.97	1.552	5.97	1.530	5.74	1.571	5.94	1.548	6.741***	50>70*,60>70*
5년 전, 삶의 만족도	5.82	1.549	5.85	1.542	5.72	1.548	5.82	1.546	1.934	
5년 후, 삶의 만족도	6.31	1.574	6.06	1.594	5.67	1.657	6.12	1.609	48.358***	50>60*>70*

* p<.05, ** p<.01, *** p<.001

학력에 따른 행복 관련 변인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이 행복 요인 전반에 걸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F=31.010, p<.001), 일에 대한 가치(F=47.725, p<.001),

삶의 사다리(F=45.458, p<.001), 행복(F=37.164, p<.001)에 대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해본 결과, 석사이상>대졸>전문대졸>고졸>고졸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다소 특이한 점은 5년 전(F=26.439, p<.001)과 5년 후(F=50.140, p<.001)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석사이상>전문대졸>대졸>고졸>고졸미만 순으로 전문대졸자가 대졸자보다 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학력에 따른 행복 관련 변인 분석

행복 관련 변인	고졸미만 (2,429명)		고졸 (1,840명)		전문대졸 (233명)		대졸 (519명)		석사이상 (110명)		전체 (5,131명)		F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삶의만족도	5.41	1.493	5.58	1.492	5.90	1.510	5.97	1.524	6.56	1.481	5.58	1.514	31.010***
일에 대한 가치	5.52	1.501	5.78	1.502	6.18	1.606	6.20	1.554	6.97	1.742	5.75	1.545	47.725***
삶의사다리	5.53	1.556	5.78	1.514	6.10	1.616	6.24	1.510	6.93	1.425	5.75	1.563	45.458***
행복	5.74	1.538	5.97	1.505	6.33	1.645	6.37	1.523	6.94	1.377	5.94	1.548	37.164***
5년 전, 삶의만족도	5.65	1.527	5.85	1.529	6.27	1.525	6.16	1.587	6.60	1.402	5.82	1.546	26.439***
5년 후, 삶의만족도	5.84	1.601	6.22	1.571	6.70	1.547	6.63	1.569	6.99	1.310	6.12	1.609	50.140***

* p<.05, ** p<.01, *** p<.001

혼인상태에 따른 행복 관련 변인을 분석한 결과, 기혼 유배우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사별>이혼>별거>미혼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혼인상태에 따른 행복 관련 변인 분석

행복 관련 변인	미혼 (84명)		기혼유배우자 (4,121명)		별거 (60명)		이혼 (335명)		사별 (531명)		전체 (5,131명)		F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삶의만족도	4.63	1.795	5.71	1.470	4.77	1.566	4.79	1.654	5.30	1.433	5.58	1.514	49.144***
일에 대한 가치	4.93	2.040	5.87	1.499	5.23	1.651	5.07	1.635	5.41	1.530	5.75	1.545	37.106***
삶의사다리	4.79	1.831	5.89	1.493	4.67	1.753	4.88	1.708	5.44	1.616	5.75	1.563	57.090***
행복	4.89	1.830	6.09	1.466	4.78	1.814	5.01	1.799	5.60	1.548	5.94	1.548	67.750***
5년 전, 삶의만족도	4.87	1.692	5.97	1.486	4.73	1.755	4.96	1.623	5.50	1.581	5.82	1.546	59.208***
5년 후, 삶의만족도	4.98	1.939	6.28	1.537	5.33	1.734	5.38	1.822	5.63	1.615	6.12	1.609	57.054***

* p<.05, ** p<.01, *** p<.001

자녀가 있을 경우가 없을 때에 비해 행복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11>). 그리고 현재 경제적 도움을 받는지 여부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에 더 행복하다고 보고하였으며(<표 12>), 반대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에 더 행복하다고 나타났다(<표 13>).

<표 11> 자녀 유무에 따른 행복도

자녀	있다(4,714명)		없다(417명)		t 값
	M	SD	M	SD	
삶의 만족도	5.62	1.501	5.09	1.574	6.845***
일에 대한 가치	5.78	1.532	5.35	1.636	6.578***
삶의 사다리	5.80	1.537	5.18	1.735	5.415***
행복	5.97	1.529	5.51	1.687	5.124***
5년 전, 삶의 만족도	5.86	1.539	5.42	1.578	7.740***
5년 후, 삶의 만족도	6.17	1.593	5.61	1.694	6.994***

* p<.05, **p<.01, ***p<.001

<표 12> 현재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와 행복도

현재 경제적 도움 받는지 여부	받고 있다(925명)		받고 있지 않다(4,206명)		t 값
	M	SD	M	SD	
삶의 만족도	5.29	1.569	5.64	1.494	-6.363***
일에 대한 가치	5.37	1.566	5.83	1.528	-6.167***
삶의 사다리	5.40	1.628	5.82	1.538	-8.245***
행복	5.62	1.631	6.00	1.521	-8.117***
5년 전, 삶의 만족도	5.57	1.603	5.88	1.528	-7.423***
5년 후, 삶의 만족도	5.70	1.709	6.22	1.571	-7.160***

* p<.05, **p<.01, ***p<.001

<표 13> 현재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와 행복도

현재 경제적 도움 주는지 여부	주고 있다(620명)		주고 있지 않다(4,511명)		t 값
	M	SD	M	SD	
삶의 만족도	5.76	1.613	5.55	1.498	3.237**
일에 대한 가치	6.07	1.570	5.70	1.536	5.512***
삶의 사다리	5.97	1.598	5.72	1.556	3.813***
행복	6.14	1.596	5.91	1.539	3.446**
5년 전, 삶의 만족도	6.00	1.601	5.80	1.537	3.109**
5년 후, 삶의 만족도	6.40	1.571	6.08	1.610	4.655***

* p<.05, **p<.01, ***p<.001

은퇴여부에 따른 행복관련 변인을 분석하면, 취업해 본 적이 없거나, 은퇴를 하지 않았거나 은퇴를 했어도 소일거리를 하는 경우에 행복도가 높았다. 반면, 은퇴한 경우에는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표 14>).

<표 14> 은퇴여부 따른 행복 관련 변인 분석

행복 관련 변인	은퇴 (1,040명)		부분은퇴 (128명)		은퇴안함 (3,049명)		취업무경험 (914명)		전체 (5,131명)		F
	M	S.D	M	S.D	M	S.D	M	S.D	M	S.D	
삶의만족도	5.42	1.614	5.45	1.468	5.61	1.446	5.66	1.607	5.58	1.514	5.475**
일에 대한 가치	5.42	1.621	5.62	1.480	5.88	1.499	5.69	1.556	5.75	1.545	23.995***
삶의사다리	5.56	1.721	5.84	1.484	5.78	1.494	5.83	1.598	5.75	1.563	6.490***
행복	5.73	1.696	5.91	1.492	5.98	1.480	6.04	1.581	5.94	1.548	8.519***
5년 전, 삶의만족도	5.66	1.675	5.89	1.574	5.83	1.492	5.95	1.555	5.82	1.546	5.835**
5년 후, 삶의만족도	5.84	1.719	5.99	1.555	6.21	1.539	6.16	1.676	6.12	1.609	14.312***

* p<.05, ** p<.01, *** p<.001

4. 인구학적 특성과 정부의 지원정책

정부의 지원정책 선호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여 <표 15>에 제시하였다. 교차분석시 카이제곱 검정 결과, 학력, 혼인상태, 자녀유무에서 접근유의수준이 p<.05 이므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학력, 혼인상태, 자녀유무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선호도와 서로 상관성이 있음을 수 있었다. 전체 교차분석 결과, 주거비 지원 602명, 생활비 지원 1,355명, 의료비 지원 2,237명, 기타 지원 22명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비 지원이 단연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 연령대, 학력, 혼인상태, 자녀유무, 은퇴여부 등 전반에 걸쳐, 의료비>생활비>주거비>기타 지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혼인상태가 미혼의 경우에만 의료비지원보다 생활비지원에 대한 선호도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5. 정부의 지원정책 선호도와 행복도와의 관계

정부의 지원정책과 행복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ANOVA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이 행복 관련요인 6가지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Scheffe) 결과 삶의 만족도(F=18.872, p<.001), 일에 대한 가치(F=14.111, p<.001), 삶의 사다리(F=32.202, p<.001)에서는 의료비지원>생활비지원>주거비지원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행복(F=19.937, p<.001)과 5년 전(F=12.751, p<.001)과 5년 후(F=17.059, p<.001)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의료비지원>생활비지원>주거비지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기타 지원은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가치, 삶의 사다리에서 주거비 지원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5> 정부의 지원정책 선호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구분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총계 4,216명(100%)	
		주거비지원 (602)		생활비지원 (1,355명)		의료비지원 (2,237)		기타 (22)			
		명	%	명	%	명	%	명	%		
성별	남	333	7.9	747	17.7	1,264	30.0	15	0.4	2,359	56.0
	여	269	6.4	608	14.4	973	23.1	7	0.2	1,857	44.0
연령대	50대	309	7.3	700	16.6	1,077	25.5	10	0.2	2,096	49.7
	60대	228	5.4	469	11.1	852	20.2	9	0.2	1,558	37.0
	70대	65	1.5	186	4.4	308	7.3	3	0.1	562	13.3
학력	고졸미만	260	6.2	666	15.8	990	23.5	6	0.1	1,922	45.6
	고졸	242	5.7	488	11.6	793	18.8	10	0.2	1,533	36.4
	전문대졸	23	0.5	70	1.7	113	2.7	1	0.0	207	4.9
	대졸	66	1.6	110	2.6	267	6.3	5	0.1	448	10.6
	석사이상	11	0.3	21	0.5	74	1.8	0	0.0	106	2.5
혼인상태	미혼	16	0.4	31	0.7	24	0.6	0	0.0	71	1.7
	기혼유배우자	430	10.2	1,064	25.2	1,867	44.3	19	0.5	3,380	80.2
	별거	14	0.3	19	0.5	25	0.6	0	0.0	58	1.4
	이혼	71	1.7	101	2.4	124	2.9	2	0.0	298	7.1
	사별	71	1.7	140	3.3	197	4.7	1	0.0	409	9.7
자녀 유무	자녀있다	523	12.4	1,235	29.3	2,072	49.1	22	0.5	3,852	91.4
	자녀없다	79	1.9	120	2.8	165	3.9	0	0.0	364	8.6
은퇴여부	은퇴	129	3.1	325	7.7	578	13.7	7	0.2	1,039	24.6
	부분은퇴	19	0.5	42	1.0	66	1.6	1	0.0	128	3.0
	은퇴안함	454	10.8	988	23.4	1,593	37.8	14	0.3	3,049	72.3

<표 16> 정부 지원정책 선호도와 행복 변인 간의 ANOVA분석

행복관련 변인	주거비지원 (N=602)		생활비지원 (N=1,355)		의료비지원 (N=2,237)		기타 (N=22)		F	사후검증 (Scheffe)
	M	S.D	M	S.D	M	S.D	M	S.D		
삶의만족도	5.27	1.448	5.44	1.501	5.70	1.481	6.23	1.445	18.872***	c>b>a, d>a
일에 대한 가치	5.47	1.494	5.69	1.528	5.87	1.550	6.55	1.595	14.111***	c>b>a, d>a
삶의사다리	5.30	1.607	5.60	1.576	5.92	1.495	6.41	1.532	32.202***	c>b>a, d>a
행복	5.55	1.566	5.83	1.530	6.06	1.519	6.50	1.626	19.937***	c>b>a
5년 전, 삶의만족도	5.49	1.556	5.74	1.536	5.91	1.528	6.18	1.790	12.751***	c>b>a
5년 후, 삶의만족도	5.78	1.524	6.02	1.598	6.26	1.590	6.55	1.896	17.059***	c>b>a

* p<.05, ** p<.01, *** p<.001 a=주거비지원 b=생활비지원 c=의료비지원 d=기타

정부의 지원정책 선호도가 행복도에 대해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복 변인 6가지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가치, 삶의 사다리, 행복, 5년 전과 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선호도의 설명력은 1%, 0.7%, 1.8%, 1.1%, 0.8%, 0.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각각의 F 값이 거의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6가지 행복요인 중에서 일에 대한 가치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지원과 생활비지원은 행복 변인 6가지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정부 지원정책 선호도와 행복 변인간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B	표준오차	β			
삶의 만족도	(상수)	5.679	.049		115.431	.000	
	더미지원정책1	-.410	.079	-.087	-5.208	.000	1.450
	더미지원정책2	-.243	.064	-.071	-3.792	.000	1.800
	더미지원정책3	.020	.059	.007	.340	.734	1.911
	R=.104 R ² =.011 수정된 R ² =.010 F=18.633, p=.000 Durbin-Watson=1.480						
일에 대한 가치	(상수)	5.716	.050		113.643	.000	
	더미지원정책1	-.249	.080	-.052	-3.100	.002	1.450
	더미지원정책2	-.029	.065	-.008	-.444	.657	1.800
	더미지원정책3	.154	.060	.050	2.574	.010	1.911
	R=.084 R ² =.007 수정된 R ² =.007 F=12.243, p=.000 Durbin-Watson=1.531						
삶의 사다리	(상수)	5.843	.051		115.461	.000	
	더미지원정책1	-.547	.081	-.113	-6.766	.000	1.450
	더미지원정책2	-.248	.066	-.070	-3.761	.000	1.800
	더미지원정책3	.076	.060	.024	1.268	.205	1.911
	R=.109 R ² =.018 수정된 R ² =.018 F=31.801, p=.000 Durbin-Watson=1.404						
행복도	(상수)	6.048	.050		120.288	.000	
	더미지원정책1	-.495	.080	-.103	-6.156	.000	1.450
	더미지원정책2	-.216	.065	-.061	-3.296	.001	1.800
	더미지원정책3	.008	.060	.003	.131	.896	1.911
	R=.109 R ² =.012 수정된 R ² =.011 F=20.639, p=.000 Durbin-Watson=1.416						
5년전 삶의 만족도	(상수)	5.950	.050		118.246	.000	
	더미지원정책1	-.458	.080	-.095	-5.695	.000	1.450
	더미지원정책2	-.212	.065	-.060	-3.237	.001	1.800
	더미지원정책3	-.045	.060	-.014	-.744	.457	1.911
	R=.093 R ² =.009 수정된 R ² =.008 F=14.899, p=.000 Durbin-Watson=1.461						
5년후 삶의 만족도	(상수)	6.164	.052		117.820	0.000	
	더미지원정책1	-.387	.084	-.077	-4.626	.000	1.450
	더미지원정책2	-.141	.068	-.039	-2.068	.039	1.800
	더미지원정책3	.092	.062	.028	1.473	.141	1.911
	R=.098 R ² =.010 수정된 R ² =.009 F=16.444 p=.005 Durbin-Watson=1.391						

더미지원정책 1 :주거비지원=1, 타지원=0, 더미지원정책 2 :생활비지원=1, 타지원=0, 더미지원정책 3 :의료비지원=1, 타지원=0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정부의 지원정책 4가지, 주거비지원, 생활비지원, 의료비지원, 기타 지원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의료비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생활비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행복 관련 요인에서는 성별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연령에서는 일에 대한 가치, 삶의 사다리, 행복, 5년 후 삶의 만족도에서 50대가 가장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70대는 낮은 기대감과 만족도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석사이상>대졸>전문대졸>고졸>고졸미만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5년 전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만 전문대졸자가 대졸자보다 좀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행복관련 변인에 있어서는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가치, 삶의 상태, 행복감, 5년 전후에 대한 삶의 만족도 모두에서 의료비지원>생활비지원>주거비지원 선호도 순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행복 추구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4대 비전 중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하위 내용에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생활비 절감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국민이 삶의 질,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고령층의 대표적인 문제인 4고 즉,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건강을 지원을 통해 삶에서 다채롭고 유의미한 활동을 통한관계, 여가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미정, 2013).

본 연구의 결과, 연구 대상 모두 의료비 지원을 가장 선호하였고, 생활비지원, 주거비 지원 순으로 정부 지원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연령대에서는 50대보다 70대가 낮은 기대감과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비나 주거비 지원보다는 의료비지원과 기타지원의 정부 지원정책을 선호하는 경우에 행복감과 일에 대한 가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학력군에 비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력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학력에 따르는 부수적인 영향들, 즉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추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결과는 5년 전후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대졸자보다는 전문대졸자들이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추후 장년층 대졸자 집단과 전문대졸자 집단에 대한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장년층 전문대졸 집단이 미래에 대한 긍정성을 갖는 요인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성, 심리적 유연성, 직무나 직위 등을 포함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관련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비지원과 주거비지원의 경우 고졸 및 고졸미만자들의 비중이 높으므로 향후에는 이들의 소득수준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추가연구계획으로 세대별 정부의 지원정책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 요구에 적합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낮은 행복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장년층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시간을 미리 확보하여 정부 차원에서 건강, 재정, 주거 등에 대한 충분한 퇴직준비를 지원하고 더불어 장년층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명철(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 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pp.1-30.
- 고용노동부(2010). 우리나라 기업의 단일 정년제 현황.
- 고종승(1999), 「정년퇴직공무원의 생활실태 및 재취업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승·황규선(2004), 「노년층의 은퇴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거주지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4(3), 69-90.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청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03-523.
- 김범수, 최은영(2017), 「은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7(1). pp.85-107.
- 김병섭·최성주·최은미(2015), 「국민 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pp.97-122.
- 김애순(2015), 장·노년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은영(2014), 「은퇴 전후 세대 재정안정성-노년기 삶의 수준에 대한 기대와 지원」, 『한국사회복지학』, 66(1), pp.61-85.
- 박경숙(2001),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141-168.
- 박선영(2013), 「삶의 의미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와 의미 증진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영, 권석만(2012),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31(3), pp.741-768.
- 박지순(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대비한 고용정책의 과제」, 『법연』, 2, pp.14-17.

- 박표진(2009), 「퇴직준비교육이 퇴직교원의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pp.89-102.
- 성미애·최새은(2010), 「남녀 은퇴자의 은퇴전이 경험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젠더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pp.13-25.
- 송건섭(2007),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1(3), pp.35-52.
- 신승배(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41(2), pp.183-208
- 신현구(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2007(3), pp.81-94.
- 장휘숙(2001), 전 생애 발달심리학: 인간발달, 서울: 박영사.
- _____ (2007), 「성공적 노화」, 『스트레스연구』, 15(4), pp.325-330.
- 전경숙(2010), 한국 중년의 안녕감: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집단간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민수(2008),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717-746.
- 조성혜(2011),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창출」, 『법연』, 16, pp.8-15.
- 차정희(2015), 「삶의 의미 추구 및 발견, 심리적 유연성, 자아탄력성의 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영미(2002),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종범·전승훈(2004), 「은퇴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노동경제논집』, 27(3), pp.1-23.
- 윤강재·김계연(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159, pp.86-98.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2, pp.576-585.
- 이아영(2011), 「중고령근로자의 은퇴과정 유형 결정요인과 은퇴과정유형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국제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균·김동규(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pp.223-250.
- 이판용(2011), 「한·미·일 베이비부머의 은퇴상황 비교」, 『CEO Focus』, 273, pp.1-21.
- 이현국·이민아(2014),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행정학보』, 48(2), pp.293-315.

- 최강식·이수원·박지영(2013),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35(4), pp.293-313.
- 최말옥·문유석(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1), pp.277-297.
- 통계청(2016), 2016 고령자통계.
- 한경혜(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 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42(3), pp.86-1418.
- 홍숙자(2016), 노년학 개론, 서울: 夏雨.
- Blau, P. M. & Duncan, O. D.(1967), *The America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y.
- Bound, J., Schoenbaum, M. and Waidmann, T.(1995), "Disability Status and Racial Differences in Labor Force Attach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upp.), 227-267.
- Campbell, Angus & Converse, Philip E. & Rodgers, Willard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 Campbell, Angus(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 Cuadrado-Ballesteros, B., Garcia-Sanches, I., & Prado-Lprenzo, J.(2012), "Effects of different modes of local public services delivery on quality of life in Spain",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37, pp. 68-81.
- Diener, E., & Fujita, F. (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8, pp. 926 - 935.
- Dimian, G. C. & Barbu, A.(2012), "Public services-key factor to quality of life", *Management & Marketing*, 7(1), pp. 151-164.
- Lauer, R. H. & Lauer, J. C.(2007), *Social Problems and the Quality of Life*(11th ed.), Boston:McGraw Hill.
- Easterlin, R, A.(2006), "Life Cycle Happiness and Its Sources: Intersections of Psychology, Economics, and Demograph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7, pp.463-482.
- Easterlin, R. A. & Sawangfa, O.(2009), "Happiness and domain satisfaction: new directions for the economics of happiness" In Dutt, A. K & Radcliff B.(eds),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Edward Elgar.
- Heady, B., Veehoven, R., & Wearing, A.(1991), "Top-down versus bottom-up theories

-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1), pp. 81-100.
- Kim, H. and DeVaney, S. A.(2005), "The selection of partial or full retirement by older work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6(3), 371-394.
-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OECD Social Indicators*.
- OECD(2014), *OECD Economic Surveys of Korea 2014*.
- Park, H. & Smits, J.(2005),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in South Korea: Trends 1930-1998"
-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Vol. 22, pp.337-356.
- Sammartino, F. J.(1987), "The Effect of Health on Retirement", *Social Security Bulletin*, 50(2), 31-47.
- Woodruff-Pak, D.S.(1997), *The neuropsychology of aging*. Malden, MA : Blackwell Publishers Inc.